

신정부 광역경제권정책과 제주경제의 대응방안

정수연*

목 차

- I. 서론
- II.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에의 영향
- III.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위치
- IV.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방안
- V. 결론

1. 서론

최근 제주도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정부가 추진해왔던 지방균형발전정책은 지역별로 자원을 균등배분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규모의 경제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정부동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아래 균등배분되는 자원들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각 지자체간의 경쟁은 사업의 질적경쟁이 아닌 사업의 양적경쟁으로 나타났고, 이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은 지역특성없는 동일유사사업들의 난립이었다.

지난 정부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하에 전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들을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성있는 지방발전정책으로서 새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바로 광역경제권구상이다. 광역경제권정책은 수도권규제완화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지역경쟁력이 큰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완화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이 이익을 비수도권의 발전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은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도와 함께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광역경제권의 이 같은 지역구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광역경제권 내에서 경쟁하면서 그 결과 특별히 우월한 성과를 내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부여받고 있는 혜택들을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이 광역경제권정책은 현재 많은 비판과 반발을 받고 있다. 첫째, 광역경제권정책은 각 지자체들의 차이를 무시한 채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할 것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과 다른 지역들의 모든 경쟁력을 합한 것보다도 많다는 것이 현실임에도, 각 지자체들은 수도권과 함께 경쟁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경쟁력있는 수도권에서 창출한 이익이 과연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이다. 경쟁력있는 수도권에서 창출한 이익을 지방발전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말언”이 아니라, “법제화”와 “제도화”로 구현되어야 함에도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요지이다. 세 번째는 현재의 지역발전정책, 더 자세하게는 광역경제권정책에는 신성장동력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과거의 “특정산업육성정책”에 다름아니며, 진정한 신성장동력산업, 즉 지식기반산업을 뒷받침할만한 정책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간단한 예로, 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산업단지 등의 “건설”위주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산업의 주요한 생산공간은 공장이나 단지가 아닌, 오피스이다. 그러나 오피스공급에 관한 정책은 발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세계의 주요한 지식기반산업의 발전과정을 보면, 인위적인 산업단지의 공급은 거의 실패로 돌아갔으며, 지식기반기업들의 자생적인 지역적 집적에 의한 성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광역경제권 사업은 과거의 전통산업(굴뚝산업)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유지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정책들, 기업들의 입지수요특성의 고려가 없는 일방적인 산업단지조성, 산업특성의 차이를 무시한 일률적인 제도들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경제권정책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보다는 이를 주어진 “제약”으로 간주하고, 이 제약 하에서의 최적화, 즉 최적의 대응전략을 강구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광역

경제권정책에 대하여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변화된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하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하면 도약의 기회로 이 위기를 반전시킬 것인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다른 광역권들은 향후 국가성장을 선도할 산업으로 예견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대부분을 선도프로젝트로 부여받고, 대규모 산업벨트들이 선도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전략들로서 제안되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과레저, 물산업만이 부여되었을 뿐이다. 특히 다른 광역권들이 초광역권개념을 통해 여러형태의 해외경제네트워크로의 편입이 예정된 반면, 충청도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초광역네트워크에도 속하지 못하였다. 향후 남해안선벨트에 편입될 것으로 보이나, 뒤늦은 편입으로 인해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견된다. 더구나 관광산업은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권에 골고루 부여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가 광역경제권구상내에서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무한경쟁의 출발점에 선 이러한 현실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비판하고,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이유에 대하여 논하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역량을 점검하고, 향후 전개될 무한경쟁시스템에서 생존하고, 질적성장의 계기로 삼아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재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외적인 경제현황들의 변화들을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위치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나아갈 바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현재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정책을 간략히 정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의 영향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위치를 지역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긍정과 도약의 요인들을 찾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바를 총론적 수준에서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추가적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에의 영향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광역경제권이란 자립적이고 경쟁력있는 지역경제권의 육성을 위해 단위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리적으로 연속된 복수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설정하는 공간단위로 정의된다(이원섭, p.14). 새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의 5개의 광역권으로 구분하였으며,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대 특별광역권으로 구분하였다.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광역은 5+2, 즉 7개의 광역권을 말하며, 초광역권은 이 총 7개의 광역권들을 4개의 개발권, 즉 남해안선벨트, 서해안신산업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 접경벨트들로 재그룹화 한 것을 말한다. 광역을 뛰어넘는 광역이라하여 이를 초광역이라고 한다. 기초생활권은 세가지 범주중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 단어그대로 지역발전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인 시·군을 말한다.

1. 기초생활권의 추진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에의 영향

전국의 시·군들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교육·의료·문화 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낙후된 농산어촌은 레저와 휴양의 중심지로 만들고, 2차산업과 3차산업의 융합으로 자체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이 기초생활권의 추진방안이다. 아직 기초생활권의 추진방안이 완전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문화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까지 3조3천억원이 낙후된 기초생활권 지역의 문화활성화를 위하여 투입될 예정이다. 기초생활권 추진방안의 일례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방방곡곡 문화활동 지원에 3640억원,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1조4658억원,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에 1조267억원, 문화창조 거점지역 조성에 450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들 중 주목할만한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다. 이미 문화부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해 지리산권 7개 시·군으로 구

성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결성하고 저탄소녹색 관광 상품으로 전남 신안·장흥·담양·완도 등에 ‘슬로시티’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창고, 공장, 기차역 등 지역에 방치된 유휴시설과 폐산업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군산의 내항, 신안의 염전과 소금창고, 포천의 폐채석장, 대구의 옛 KT&G 연초장, 아산의 옛 장항선 등 5개소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기로 되어 있다²⁾.

이제 모든 전국의 시·군들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들을 개발하여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여야 한다.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전략들은 국가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전략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성장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상품의 매력력이 소진되어갈 때, 대체관광상품들의 등장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2. 광역경제권의 추진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에의 영향

광역경제권은 전술한바와 같이, 전국을 7개의 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있다(<그림 1>참조).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군들, 그 시·군들의 상위체인 시·도는 7개의 권역으로 다시 그룹화된다. 그리고 이 그룹화된 각각의 경제권들은 특정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은 지식정보산업, 충청권은 의약바이오 및 뉴정보기술(IT)산업, 대경권(대구·경북)은 IT 융·복합산업과 그린에너지 산업 강원권 의료융합 및 의료관광산업,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수송기계 및 융합부품소재, 제주권은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이 선도산업으로 정해져, 향후 해당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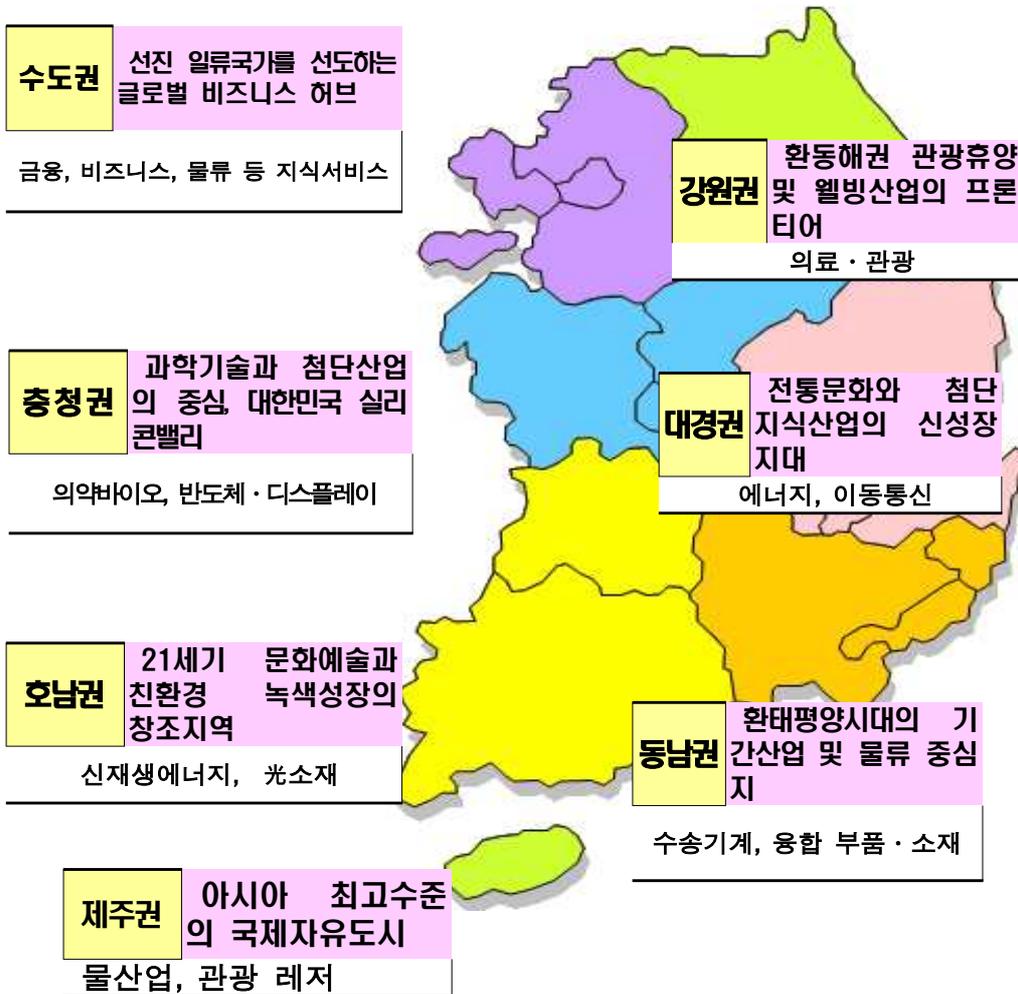
7대광역경제권에 대한 이러한 선도산업 지정은, 과거 노무현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전 지자체의 유사·중복사업화를 유발함에 따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러한 유사·중복사업화를 미연에 방지하여, 실효성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새정부의 의지이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대부분의 사업들, 의료관광이나,

2) 세계일보 2008년 12월 15일

신재생에너지, BT산업의 육성과 같은 것들이 타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해당산업들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새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나, 의료관광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선도산업으로 지정된 타 권역에 비해서는 확실히 차순위가 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 외의 전략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림 1> 지식경제부가 제시한 선도산업의 예



3. 초광역경제권의 추진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에의 영향

7개의 광역경제권은 다시 4개의 초광역경제권으로 그룹화된다.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신산업벨트, 동해안에너지 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가 그것이다(<표 1>과 <그림 2> 참조). 초광역개발권은 7개의 광역경제권을 그룹화하여 규모의 경제, 집적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글로벌경제시대에서 대외개방형으로 국토의 경제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다.

<표 1> 초광역개발권의 발전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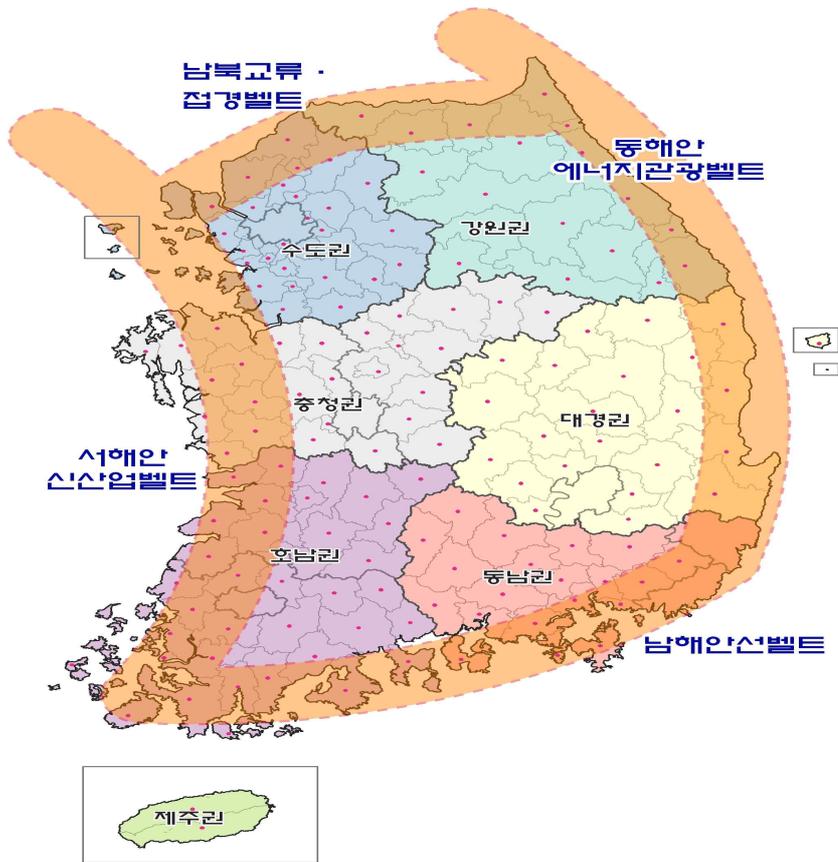
초광역개발권	발전 비전
남해안 선벨트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극(對極) 성장거점을 구축하여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기간산업·물류·관광중심지 육성
서해안 신산업벨트	중국 환황해권에 대응하는 차세대 IT, 자동차, 철강, 물류 등 주력산업중심 융합산업 육성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및 환동해권 관광·레저 거점으로 육성
남북교류·접경벨트	평화 정착·교류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 단지 개발 및 생태 환경 자원 보존 등

즉 서해안신산업벨트의 경우에는 상하이 오사카, 인천을 잇는 환황해경제권에서 한국의 주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며, 남해안선벨트는 일본서남부와 연계하여 국경을 초월한 초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초광역경제권전략은 현재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의 경제블럭화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국토공간구조를 마련한다는 점에 있어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전체적으로, 즉 국가전체 평균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략이지만,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 있어서는 지역성장의 명암이 엇갈릴 확률이 매우 큰 전략이다. 한정된 정부재원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의 범주를 기준으로 배분된다고 할 때, 이제는 모든 지자체가 동등하게 재원을 배분 받는 것이 아니라, 괄목할만한 성과와 차별화된 전략을 구체화하는 지자체들에게 우선 배분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 초광역경제권 개발정책은 기초생활권이나 광역경제권 정책보다 더 불리한 지역발전정책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충청도와 함께 어떤 초광역경제권에도 속하지 못하였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러한 우려가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남해안선벨트로의 편입이 예정되어 있지만, 경남과 전남권을 중심으로하는 남해안선벨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이 두드러지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는 남해안선벨트가 휴양, 크루즈, 관광레저, 국제금융중심지로의 성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오히려 남해안선벨트와 경쟁을 하여야 하는 위치가 될 수도 있다.

<그림 2> 초광역경제권의 공간적 배치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위치

1.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혁신역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는 크게 유리하지않은 상태이다. 특히 초광역경제권개발정책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향후 국가경제발전에 있어, 글로벌경제네트워크가 창출하는 이익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향유할 수 있으려면, 초광역경제권개발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한다. 현재 새정부의 초광역경제권개발이 주로 해안을 위주로 개발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리적위치에서 동북아경제권과 환태평양경제권으로의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남해안과 동해안은 이 두 경제권으로의 교두보역할을 하는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위치는 동북아경제권과 환태평양경제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경제권개발정책에서 이러한 강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역량이 현재 타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2006)의 전국 시도에 대한 지역혁신역량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총합혁신지수와 4대 부문별 혁신지수 모두에서 서울, 경기, 대전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충북, 경북, 광주, 인천이 한참 뒤진 상태에서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9개 시·도는 혁신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의 부문별 혁신지수는 최하위이며, 특히 지식창출부문, 지식전달 및 응용부문, 혁신지원금융, 산출, 시장부문에서 최하위이며, 인적자원부문에서는 전남과 더불어 최하위이다.

<표 2> 전국 및 시·도별 종합혁신지수 및 부문별 혁신지수

	종합혁신지수 (SII)	인적자원부문 (CII1)	지식창출부문 (CII2)	지식의 전달 및 응용부문 (CII3)	혁신 지원 금융, 산출, 시장부문 (CII4)
전 체	0.4895	0.4534	0.3380	0.5532	0.5654
서 울	0.6422	0.7431	0.4900	0.4945	0.7413
부 산	0.3168	0.2932	0.0673	0.5027	0.3700
대 구	0.3069	0.3660	0.1103	0.3842	0.3329
인 천	0.3875	0.2860	0.1653	0.5548	0.4913
광 주	0.3935	0.4913	0.1742	0.4582	0.4120
대 전	0.8194	0.9306	0.9538	0.8500	0.6456
울 산	0.3142	0.2265	0.0772	0.5760	0.3626
경 기	0.6637	0.5088	0.6842	0.6349	0.7791
강 원	0.2247	0.1431	0.0277	0.4501	0.2667
충 북	0.4582	0.3181	0.2324	0.7067	0.5454
충 남	0.3355	0.1821	0.1557	0.6149	0.3880
전 북	0.2997	0.1675	0.0628	0.6272	0.3425
전 남	0.1480	0.1002	0.0249	0.3331	0.1467
경 북	0.5083	0.3371	0.2777	0.5241	0.7533
경 남	0.3201	0.2270	0.1260	0.5123	0.3878
제 주	0.0666	0.1846	0.0104	0.0000	0.0525

출처 : 장재홍(2006), 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p. 43

물론 이러한 지역역량측정지표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내적 잠재역량까지 측정해내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자연유산이라는 뛰어난 부존자원이 있고, 해녀문화와 신화라는 문화자원이 있으며, 타지역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독특한 민속자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을 계량화하여 지표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표 2>과 같은 지표로는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내부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위의 표와 같은 지표들이 사용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창출되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주어진 성질의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역량의 과소평가는 측정지표의 객관성문제도 존재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이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초광역개발에 있어 거점으로 개발되기에 는 물적, 인적자원이 타지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념하여 혁신역량지수를 타 시도에 비하여 향상시키도록 성장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자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잠재역량을 객관화하는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이를 지표화하여 타시도에 비하여 우월한 점들을 홍보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2. 도외경제상황에 좌우되는 취약한 산업경쟁력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와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3%밖에 안되는 농업과 서비스업중심의 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때문에 지역총생산을 좌우하는 것은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이며 그중 관광산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산업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경쟁력은 타 시도에 비하여 높다고 하기 어렵다. 강철준(2003)에 의하면, 감귤산업은 수요및 원가경쟁력이 시장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경쟁력의 열세를 제도적 지원에 의해 만회하는 구조이다. 또한 관광산업은 감귤에 비해서는 시장환경 경쟁력이 높으나, 원가경쟁력은 감귤산업보다 낮다고 지적된 바 있다.³⁾ 이는 감귤산업은 자체적 기술발전에 의한 성장을 하지 못하여 정부 보조에 의해서만 유지가 가능한 상태이고, 관광산업은 아직도 국내에서 인지도가 있으나 높은 관광비용에 비하여 관광만족도는 낮은 “고비용, 저효용”의 상태임을 의미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 산업인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의 이러한 부진은 지역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산업의 성장정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전체의 성장률을 전국평균보다 하회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이후 제주지역의 실질GRDP 성장률과 전국의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이후의 제주의 지역총생산의 성장률은 2001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1년은 미국의 9.11테러가 발생하여 해외여행수요가 급감하고, 제주관광이 반사이

3) 강철준(2003), p.19

익을 얻었던 시기이다. 또한 2008년 역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어서면서 해외여행수요가 위축되어 제주관광객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보여주는 것은 제주도 경제가 타 지역보다 고성장을 하는 것은 대부분 도외, 즉 국내경기와 해외경기침체로 인해 제주관광의 대체상품인 해외관광상품수요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관광호재”에 의존해왔다는 것이다.

국내경기가 호황일 때는 전국평균보다 낮은 경제성장율을, 국내경기가 불황일 때는 해외관광상품수요급감이라는 호재가 있어야만 전국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율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제주도 산업경쟁력의 지속적 약화를 의미한다. 제주경제 외적 호재요인이 없이는 제주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제주경제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이는 1998년 이후 국내경제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변화한 반면, 제주경제는 산업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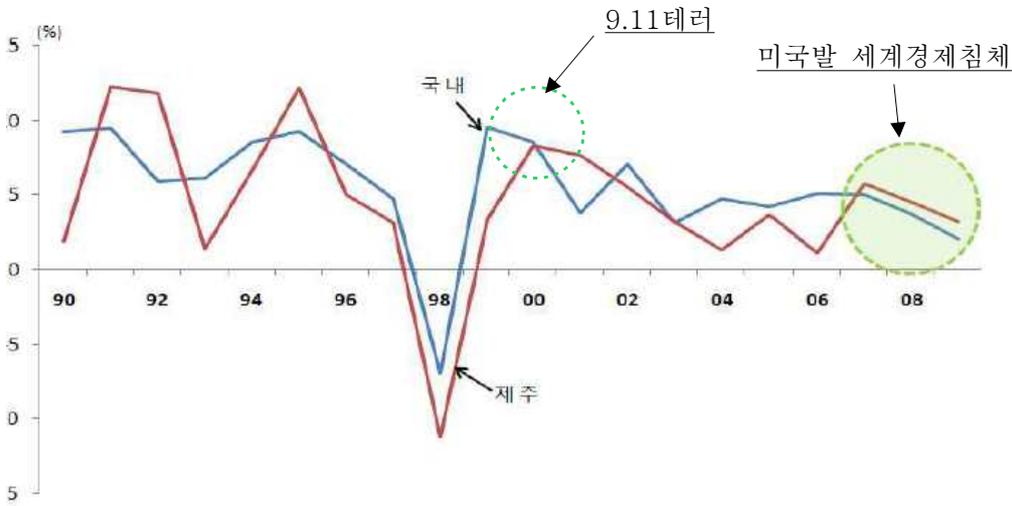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황이란, 비효율적인 기업들의 자연도태과정이며, 호황으로 가는 관문이다. 비효율적인 기업들의 자연도태를 통해 산업구조가 조정되고, 경제의 체질이 질적으로 변화한다. 이 조정과정은 정책당국의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그 조정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경제는 1998년 산업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경기가 침체가 오히려 제주경제에 호재로 작용하여 비효율적 기업, 혹은 산업의 자연도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제주경제내에 비효율적인 기업과 산업을 계속하여 존속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제주의 산업경쟁력 약화의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부호재는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저해한다. 효율성과 자생력을 높이라는 노력은 도태에 대한 위기감에 의하여 촉진되는 것인데, 외부호재는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불황기에 전국적으로 효율성과 자생력을 높이라는 노력들이 이루어질때 제주경제는 그러한 노력을 할 유인이 없고, 이는 제주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반면, 2008년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세계경제침체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현재의 외부호재를 “소비”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위한 “투자”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경제침체

로 인하여 공격적 정책을 펴기 어려운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격적이면서 미래투
 자적인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따라서 이 시기 각 산
 업들의 정책적 구조조정을 마련하고,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의 질적 변화, 질적 도약
 을 유도하여야 한다. FTA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고품
 질감귤상품의 개발, 국내경기가 호경기임에도 해외관광상품보다 더 선호되는 제주관
 광이 될 수 있다면, 외부호재가 있을 때는 더 큰 폭으로 성장하고, 국내경기가 호경
 기일때는 국내평균수준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나타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 장기
 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전국대비 제주의 실질GRDP 성장률



주 : 한국은행 2009년 제주경제전망의 제주실질GRDP그래프 재정리

IV.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방안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
 권의 세범주로 구분된다. 광역경제권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의 단일한 경제
 권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선도프로젝트로는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이 지정되어 해

당산업에 대해서는 타 권역에 비하여 지원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다.

비관적 관점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왔던 4+1핵심산업, 즉 관광, 의료, 교육, 청정1차산업, 첨단산업들이 타 권역의 선도산업화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발전전략의 가치가 희석화된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낙관적 전망도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도프로젝트가 관광·레저산업이기 때문에, 4+1핵심산업들을 의료관광, 체류형 교육관광, 청정1차산업의 쇼핑관광상품화 등 관광이미지를 가미, 강화하여 전략의 수정과 함께 추진할 수도 있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BT산업의 관광상품화, 신재생에너지의 체험형 관광마을 육성 등으로 전략을 구체화하여 추진함으로써 단기적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른 광역권들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일한 하나의 광역경제권의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타 지자체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조정을 거쳐야하는 것에 비하여 의사결정의 속도와 추진력에서 우월할 수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짜임새있는 정책과 가속화된 추진력을 갖춘다면, 향후 제주경제의 장기적 성장전망을 낙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각 산업들의 개별적인 대안들 보다는 총론적 수준에서 광역경제권구도하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1. 발전전략의 기초 : 산업간 전후방관계를 고려한 산업육성전략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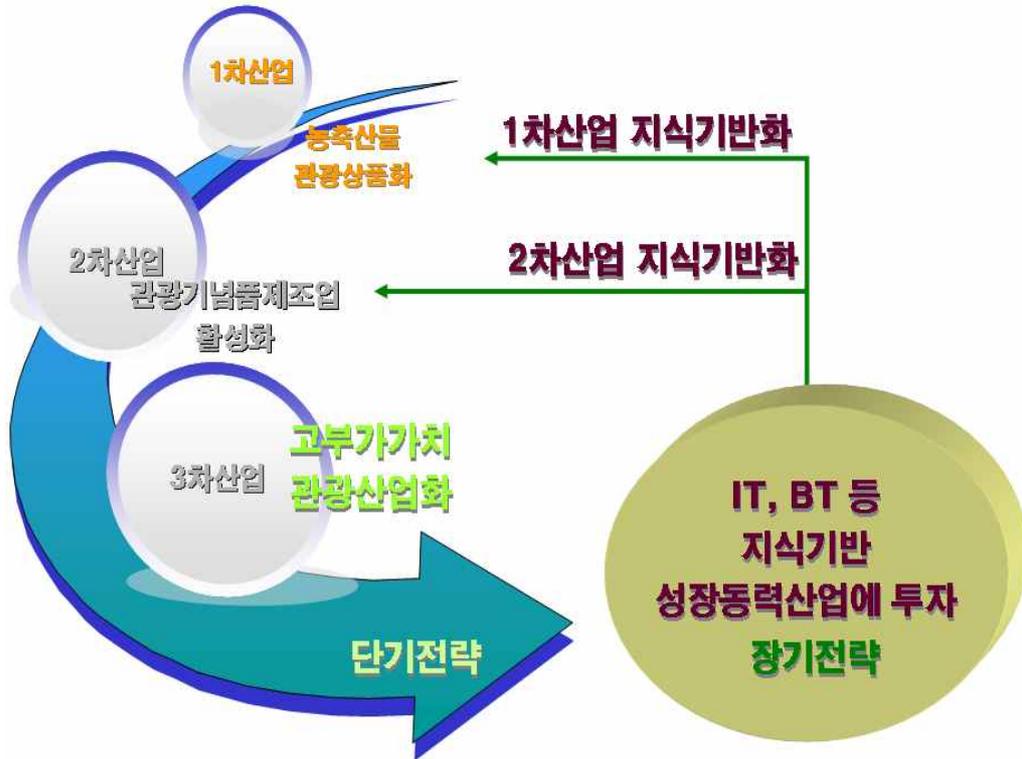
광역경제권정책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도산업은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이다. 향후 이 두

산업에 대해서는 재원의 우선배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두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두 산업외의 다른 산업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육성하되 그 투자재원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부터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에 기초하여 단기적으로는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그로부터 창출된재원으로 장기적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관광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려면 무엇보다도 제주관광을 고급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4+1 핵심산업중의 하나인 청정농축산업은 고급화된

제주관광의 소비자가 제주에 왔다가 돌아갈 때 구매하게되는 주요관광제품으로 역할을 하고, 관광기념품제조업의 육성을 통해 제주관광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여 제주지역의 고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역시 4+1의 핵심산업인 첨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그림 4>참조).

<그림 4> 제주도 산업전후방 관계를 고려한 발전전략



2. 입체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정책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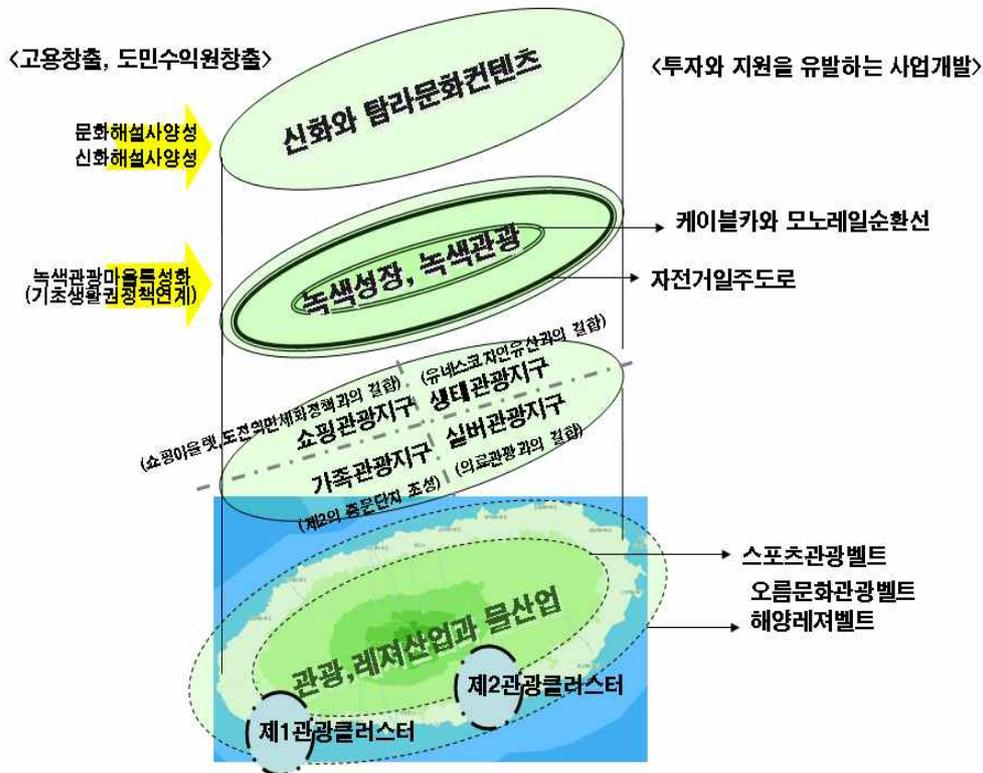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제주도의 성장발전전략은 단기방안과 장기방안이 구분되어 제안될수 있다. 일단 가장 시급한것은 제주관광의 고부가가치산업화이다. 이를 위해 많은 것들이 정책으로서 제안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책구상을 입체화할 필요가 있다.

타 권역은 매우 오랫동안 해당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해왔다. 전남의 경우에는 전남을 디지털 콘텐츠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로 만들기 위하여 10여년을 넘게 이 분야의 지역연구를 진행해왔으며, 많은 성과물이 축적되어왔다. 이러한 자료들이 정부의 광역경제권구상에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계량화되지 않은 잠재력과 경쟁력을 중앙정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성과물을 생성하고, 축적하고, 발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구상을 제안하되, 입체적이고 공간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전역에 대하여 공간적인 정책을 구상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정부가 지정한 선도산업, 즉 관광레저산업과 물산업이다.

<그림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체적이고 공간적인 발전전략제안구상



<그림 6> 남해안선벨트 사업구상도



출처 : 이명박 대선후보 정책캠프, GSI 연구자료(2007), 이정록(2008)에서 재인용

남해안 선벨트전략(<그림 7>참조)이 남해안의 부존자원과 경쟁력을 검토한 후 산업들을 공간적으로 배치한 것 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발전전략도 공간적이고, 입체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은 “집적”이다. 공간적 집적은 산재한 각 개체들이 흩어져 분포할때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준다. 산재한 각 개체들이 모여 이루어내는 시너지효과는 “집적”이 가져오는 성과의 근본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발전전략도, “공간적 집적”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발전전략은 “관광”으로 연결되어야만 정부의 지원을 설득하는데에 보다 용이할 것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은 “관광의 집적화 그리고 공간적 재배치”로 요약할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해안을 중심으로 해양레저벨트라는 이름하에 개발전략을 수립한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 방안”중의 하나인 체류형 해양레저관광기반 확충(서귀포 크루즈항)과 수요창출형 관광시설 건설(해양과학관)과도 일맥상통한다. 서귀포크루즈항과 해양과학관만을 개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 전체해안선 혹은 일부해안선에 대하여 해양레저벨트를 구상하는 것이다.

중산간과 한라산을 중심으로는 골프, 등반, 사이클등의 스포츠관광벨트를 구상한다. 혹은 최근 제주도로의 스포츠 전지훈련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서귀포 지역을 스포츠관광집적지로 구상하는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360여개의 제주오름들의 연결지도를 만들고, 이의 오름문화관광벨트라 명명함으로써 제주만의 특별한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전략중 하나로서 제안될 수 있다.

입체적이고 공간적인 발전전략의 두 번째는 제주도의 권역을 구분한 후 각각 특화된 관광지구로서 개발하는 것이다. 제주시를 중심으로한 북서쪽은 쇼핑관광지구로 지정후 쇼핑아울렛과 도전역면세화구역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북동쪽은 유네스코자연유산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지구로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남서쪽은 중문단지와 삼방산을 중심으로 가족관광지구로서 지정하고, 향후 이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관광지는 그 수요자가 가족중심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입지를 안배하는 것이다. 특히 남서쪽은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서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족관광수요와 영어교육관광수요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가족관광의 최적지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서귀포를 중심으로 하는 남동쪽은 온화한 기후로서 우리나라 실버세대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버관광지구로서 지정한 후 의료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4개 지구단위는 사실상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사업을 재배치하고, 그룹화하고, 종합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구단위의 개발은 사업의 개별단위개발보다 그 개발타당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중앙정부 재원조달에 있어 근거로서 제시되기가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종합적 정책개발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즉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발전전략구상의 세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상품과 발전전략에 “그린이미지”를 가미하는 것이다. 새정부의 주요관심사이며, 향후 엄청난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기대되는 녹색성장을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것은 곧 녹색관광을 의미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취지에 입각하여 제주도 전역에 관광객용 자전거일주도로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한라산을 관광할 수 있는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를 도입하는 것이다.⁴⁾ 광역경제권의 추진에 따라 육지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는 이유로 도로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산업과의 연계로서 특히 저탄소녹색성장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사회간접자본, 특히 그린SOC로서 자전거 도로와 모노레일, 케이블카의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⁵⁾

발전전략구상의 네 번째는 제주신화와 탐라문화컨텐츠의 관광산업, 물산업과의 결합이다. 다른 권역에는 없으나 제주에는 있는 것, 특히 문화관광시대에 제주도의 가장 경쟁력있는 부존자원은 제주신화와 탐라문화이다. 제주의 모든 관광지에, 그리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제주신화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창훈(2008)은 제주의 삼다수와 제주신화의 결합을 제안한 바 있다. 삼다수에 제주신화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는 것이다. 제주신화나 탐라문화에 대한 연구는 제주도내에서 상당히 활발하다. 그러나 이를 문화컨텐츠상품으로 만들고, 수익성있는 상품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단순히 현재의 거리축제수준으로는 제주신화와 탐라문화가 고부가가치상품이 될수 없다. 제주신화와 탐라문화컨텐츠를 어느 관광지에, 어떤 상품에 결합시키고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효과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주신화와 탐라문화, 그리고 여기에 제주만의 독특한 오름문화까지 가세하여 관광상품화하면, 이는 곧 고용을 유발하여 제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더욱 배가시킬 것이다. 제주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문화해설사, 신화해설사, 오름문화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까지 이 독특한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해설사는 제주도의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할수 있을 것이다.

4) 이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우려가 있을 것이나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훼손되는 자연, 그로부터의 손실과, 등산객이 훼손하는 자연, 그로부터의 손실을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는 단기적으로는 공사에 의한 자연훼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입장지점과 퇴장지점만을 관광객이 접하게 되어 오히려 자연을 덜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수많은 관광객이 직접 한라산을 등반하는 것은 등반로전체와 그 주변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자연훼손을 가져올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녹색성장과 녹색관광은 새정부의 지방발전전략의 첫 번째 범주, 기초생활권과도 연관된다. 이에 대해서는 “도민합의를 위한 관광집적지 제안”에서 후술한다.

3. 도민합의를 위한 관광집적지 제안 : 민자유치와 마을특성화사업의 결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곤란을 겪는 것은 무엇보다도 도민합의의 도출부분이다.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약 30%수준이며, 2007년기준으로는 전국 16개시도중 14위이다. 앞서 지역혁신역량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역량은 최하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외자본을 유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제주관광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하여 고부가가치를 형성하고, 그것을 다시 다른 산업에 투자하는 이 재생산메카니즘을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제주는 도외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전략산업들을 성장시켜야만 하며, 이것이 더 이상 미루어지면 향후 제주경제의 장기성장은 불투명해질 것이다. 국내경기가 호황으로 접어들 때에 제주경제는 침체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거의 모든 정책은 도민의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도민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제주의 발전이 곧 지역주민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도민에게 구체적인 이익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홍보라는 것은 지역구성원들을 발전의 “능동적주체”가 아닌 “수동적” 관찰자로 규정짓는 것이다. 지역구성원들을 발전의 능동적주체로 만들 수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은 곧 지역주민들의 발전전략이 되고, 정책은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을 “능동적 주체”로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민자유치와 마을 특성화사업의 결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해당자본이 일정지역을 개발할 때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치지역의 인근마을을 특성화마을로 지정, 개발하는 것이다.⁶⁾ 이는 곧 관광집적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그림 6>의 관광클러스터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 인근 지역의 마을을 그 특성

6) 이러한 마을특성화사업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서 기초생활권의 범주에 속한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특성화를 통한 관광클러스터사업을 정부의 기초생활권사업으로서 추진할 수 있다.

을 고려하여 소규모 “녹차마을” 혹은 “체험형 마방목지” 혹은 “신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의 관광객들이 야간에 혹은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인근마을을 둘러보고 해당마을의 관광상품을 소비하도록 함으로서 마을의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해당마을의 소득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역의 도외자본유치가 곧 도민소득의 증가라는 인식을 정착시킬 것이다.⁷⁾

도민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은 이제 “단순홍보”가 아닌 그리고 “보상”도 아닌 “도민 수익원의 창출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의 능동적 주체화”로 바뀌어야 한다. 도민의 능동적 주체화는 제주내 단위마을들의 자생력을 향상시켜 향후 제주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의 범주로구분하여 살펴보고, 특히 광역경제권정책을 중심으로 제주경제의 대응방안을 총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향후 보다 미시적이며, 세분화된, 디테일한 정책의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총론적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그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왔던 모든 산업발전전략들은 모두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재배치하여야 한다. 새정부의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관광산업에 잠재경쟁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며 정부의 지원을 설득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산업을 결합하고, 공간적으로 재배치함에 있어서는 집적하여야 한다. 1차산업도, 2차산업도 모두 3차산업인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결합된산업, 즉 4차산업, 5차산업으로 정의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클러스터, 벨트 등의 개념으로 집적화하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전략을 공간적으로 수립해야한다. 셋째, 지역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정책내부로 끌어들이야 한다. 즉 추진사업에 대한 도민합의는 도민수익창출로서 설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사업의 주체로 변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은 광역경제권정책에 대한 제주경제 대응방안의 개략적인

7) 더불어 이러한 방법은 해당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인근의 불거리증가로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효과도 가져와 향후 제주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준이며, 미처 포괄하지 못한 부분들도 존재한다. 향후 관련연구로서 이를 보완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후속연구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본 연구는 초광역경제권에 대한 제주경제의 대응은 다루지 못하였다. 광역경제권은 한국경제내에서 제주경제와 비제주경제의 경쟁이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네트워크경제구조하에서는 국가간의 경계가 무의미한만큼, 환태평양시대 동북아경제권에서 제주경제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동서남해안권의 산업벨트들이 제안된 만큼 후발주자일수밖에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보다 탄탄한 제도를 구상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제주도 전역에 대해 관광산업을 공간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려면, 정책의 지리적 경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제주의 자연자원의 보전, 경관보호의 경계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하는 지역의 지정, 그리고 자연을 보전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이는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고성장을 이룬 해외사례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통해 제도고안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침체기 세계경제의 위기속에서 제주경제는 또다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 제주경제의 미래는 초등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의 전략인가? 혹은 상하이와 마카오를 능가하는 국제도시인가? 이 두 갈래길에서 제주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정책구상, 신속하고 기민한 정책수행, 자발적인 도민협조가 향후 제주경제의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중앙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도내 경제주체들의 자생력을 키움으로서 경제위기에 자유로운 특별한 자치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우주호(2008), 광역경제권과 국토발전전략, 국토연구원, 2008
- 강철준(2003), 제주산업의 경쟁력분석, 제주발전포럼, 제주발전연구원
- 이정록(2008), 남해안선벨트 국책화와 향후과제, 제주지역혁신협의회 전문가포럼
- 이원섭(2008),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추진방향, KAPA포럼, 한국행정학회
- 이창훈(2008), 거석을 움직이는 힘, 스토리텔링, 제주대학교 문화컨텐츠사업단 전문
가특강자료
- 좌승희(2008), 광역경제권개발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경
제포럼 전문가 세미나
- 김태보(2008), 광역경제권 개발과 제주경제의 재도약 전략, 제주특별자치도 광역경제
포럼 전문가세미나
- 한국은행(2008),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전망
- 장재홍(2006), 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 산업연구원